

베일 벗는 트럼프 ‘사법 리스크’ “대선 개입 등 줄줄이 기소 대기”

성추문 입막음보다 큰 사건들
대선 방해는 중형 선고 가능
1·6 의회 난입사태 선동
기밀문건 유출 등도 조치 속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4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기소인부 절차를 밟고 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 기소에 대해 혐의를 부인한 것 외에는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이번 재판이 그가 안은 ‘사법 리스크’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성추문 입막음 의혹을 둘러싼 이번 기소가 재판에서 유죄로 결론 내려도 형량이나 정치적인 함의는 상대적으로 가벼울 수 있다면서 현재 수사 진행 중인 다른 의혹들이 오히려 그의 대선 가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곧 추가 기소 또 있을 것” =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 사건 중 기소가 가장 압박한 것으로 꼽히는 사건은 그가 2020년 대선 이후 조지아주 선거 결과에 개입하려 했다는 혐의다.

트럼프는 당시 경합 지역이었던 조지아주 선거에서 간 발의 차로 패배하자 2021년 1월 초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만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 검사장 페니 윌리스는 지난해 5월부터 법원 명령에 따라 특별 대배심을 구성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증언토록했다. 대배심은 올해 1월 비공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한 후 해산했다.

지난달 16일 일부 공개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대배심은 지난 대선에서 광범위한 선거 사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냈다. 그러면서 일부 증인이 위증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검사에게 이에 대해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 “선거 개입·조직적인 방해되는 형량 훨씬 더 커” = 카닝햄 교수는 윌리스 검사장이 트럼프의 혐의에 범죄 집단이나 기업의 부정거래 등 조직적인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법법인 리코(RICO)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지아주의 리코법 위반 형량은 징역 5~20년

이다. 연방 소송과 달리 주(州)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항소심이 계류 중이더라도 수감 시작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연방 검사 출신인 데니스 애프터굿은 이날 미국 MSNBC 방송에 기고한 글에서 “조지아주 기소가 뉴욕 기소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애프터굿은 “트럼프가 2020년 대선을 뒤집기 위해 조지아주 관료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 계획의 뒤에는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선거 결과 인정을 거부하도록 설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이것이 모두 증거를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지아주에서 대배심은 선거 방해와 주의 공갈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고려할 수 있다”며 “이들 범죄에는 각각 최대 10년형과 2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은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연방 의회 난입 사태를 트럼프가 배후에서 선동하며 사실상 조종했다는 의혹이다.

미 하원 의회난입조사특위는 조사 과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폭동을 전후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했다는 증거를 발견했으며,

그에 대한 기소를 법무부에 권고하는 조사 보고서 제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법무부가 임명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수사 중이다. 다만 특검의 향후 일정에 관해 아직 알려진 내용은 없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조지아주와 법무부의 수사에 대해 “둘 다 실질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 다른 형사 사건도 줄줄이 수사·재판 대기 = 아울러 법무부가 임명한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에서 압수한 100여 건의 기밀 문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하원 특위 과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다량의 기밀문서를 플로리다 자택으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법당국은 이례적으로 전직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 수사 역시 관련자들이 증언을 준비하는 등 최근 진전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폭스뉴스의 뉴스 진행자 브렛 베이어는 3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계된 복수의 비밀경호국(SS) 요원들이 소환됐으며 금요일(7일) 워싱턴DC 대배심 앞에서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해 전세계 인권운동가 401명 피살

콜롬비아·우크라이나·멕시코 순

지난해 26개 나라에서 401명의 인권 운동가들이 피살됐으며 이 중 절반인 186명(46%)이 남미 콜롬비아에서 살해됐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선의 인권 운동가들’(FLD)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크라이나에서 50명의 인권운동가가 살해돼 콜롬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다음은 멕시코(45명), 브라질(26명), 온두라스(17명) 순이었다.

남미 국가들과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인권운동가 피살 건수를 합치면 전체의 80%가 넘는다고 밝혔다.

올리브 무어 FLD 임시 사무국장은 “중남미가 여전히 인권 운동가들에게는 최악의 지역으로 확인된 가운데 어느새 400명이 넘는 인권 운동가들이 살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러시아에 의해 침공당한 우크라이나가 인권운동의 시각지대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인권 운동가 중에서도 토지와 환경, 원주민 권리 보호에 앞장서는 이들이 주로 표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LD는 지난해 살해된 인권 운동가들 가운데 이들 분야에서 활동하던 이들이 194명으로 전체의 48%, 특히 원주민 보호에 앞장섰던 이들이 2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무어 국장은 “이들 분야의 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운동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누군가 이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콜롬비아 의회는 환경운동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에스카스 협정’을 비준했지만, 환경과 인권을 위해 싸우는 이들은 여전히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가디언은 논평했다.

현지 비정부기구(NGO) 인데파스에 따르면 콜롬비아에서는 올해 들어서도 벌써 36명의 운동가들이 살해됐다. /연합뉴스

발암 논란 베이비파우더 11조원 배상 제안

존슨앤드존슨 배상 계획안 승인 요청

미국 제약·건강용품 업체 존슨앤드존슨이 발암 논란을 일으킨 자사 베이비파우더 제품의 제조물 책임에 대한 배상금으로 89억달러(약 11조7천억원)를 내겠다고 제안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제품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를 다루기 위해 2021년 설립한 자회사 ‘LTL매니지먼트LLC’의 파산보호를 재신청하면서 이러한 배상 계획안의 승인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법원과 다수의 소송 당사자들이 이런 파산 계획안에 동의하면 존슨앤드존슨은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베이비파우더 제품 소송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파산법은 파산보호 승인 요건으로 배상 청구인의 75% 이상 동의를 요구한다.

소송을 이미 제기했거나 준비 중인 약 7만명의 원고를 대리하는 법률회사 그룹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소송은 소비자들이 이 회사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하다가 암에 걸렸으며 제품 원료인 활석 성분에 포함됐을 수 있는 석면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제기됐다.

존슨앤드존슨은 자사 제품에는 발암 물질이 포함돼있지 않다고 부인하지만, 일부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이번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제조물 책임에 따른 손해 배상금으로는 손에 꼽힐 만한 대규모라고 WSJ는 전했다.

다만 이는 흡연 피해 소송에 대해 담배 회사들이 1998년 합의한 2060억달러나 제약업체가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문제와 관련해 타결한 500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한다. /연합뉴스



양동이 물로 방글라 의류시장 화재 진압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대규모 의류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4일(현지시간) 주민들이 물을 나르며 진화를 돕고 있다. 이날 6시간 넘게 이어진 화재로 목재 점포 약 3천 곳이 불에 타고 소방대원 8명이 부상했다. /연합뉴스

호주 안보단체 “기후변화가 중국보다 더 위협”

“정부 관련 정보 국민에 공개해야”

고위 퇴역 장성들이 참여하는 호주 안보단체가 기후변화가 중국보다 더 큰 위협이라면서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5일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호주 기후안보지도자그룹(ASLCG)의 크리스 베리 전 호주 해군 대장은 이날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증강보다 기후변화를 국가 안보에 더 심각한 위협

으로 규정하고 정부는 관련 보고서를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베리 전 제독은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해수면 상승·자연재해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면서 “기군, 자원전쟁, 아시아-태평양 국가로부터 대규모 인구 유입 등 잠재적 위협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기후변화는 존재적 위협”이라면서 “중국과의 분쟁보다 훨씬 큰 국가 안보 리스크”라

고 강조했다.

베리 전 제독은 “호주 국가정보국(ONI)이 작년 말 기후변화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호주 총리실과 국가정보국은 공식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노동당 정부는 작년 5월 집권한 후 미국·영국과 체결한 오키스(AUKUS) 안보동맹에 따라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3천680억 호주달러(약 318조원) 비용을 책정하는 등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합뉴스